

배포일시	2024년 12월 13일
보도일시	즉시

<민주연구원 긴급토론회>

민주연구원. 『윤석열 내란 사건에 관한 법리적 쟁점』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김민석 의원실(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과 함께 ‘윤석열 내란 사건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13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이며 장소는 의원회관 306호(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이다.
- 본 토론회는 왜 윤석열이 탄핵인용이 되어야 하는지, 왜 내란죄를 인용하여 즉각 구속과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한 가담자의 형사처벌을 어떤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윤의 내란죄 적용과 형사처벌의 법적, 이론적 근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급하게 기획하였다.
- 본 토론회는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내란주범 윤석열의 계엄령이 왜 위헌적인 내란인지, 왜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해 토론하며, 2부는 윤석열, 김용현을 포함한 내란 가담자의 형사처벌의 범위와 그 수준에 대한 『형법적 쟁점』에 치열하게 토론한다.
- 주지하다시피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한 계엄령은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위반’ 이자 ‘위법’ 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즉시 직무정지 사안이며, 이는 친위 쿠데타로 판단할 수 있는 ‘내란죄’의 적용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 계엄령은 △ 계엄법에서 정한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헌법에서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 또한 계엄령 포고는 위헌적인 내란죄임이 명백하다. △ 헌법이 정한 요건(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 국회와 정당의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했으며 △ 특전사로 이루어진 계엄군이 국회를 ‘공격’ 했다는 점이다.

- 더욱이 계엄령으로 인한 국가 내란이 더 큰 위기로 번져가고 있다. 12월 7일 탄핵 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에 따른 민주절차가 작동하지 못하는 무정부적 상태가 지속되어 우리 국민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 현재 탄핵 반대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내란주범과 종범 모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도주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내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아주 강력해야 한다.
- 본 토론회 전체의 좌장은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이다. 1부는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로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범에 대한 대응, 반드시 탄핵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제를 하고,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창환 변호사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이후 형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인 2부로 이어진다. 발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란 가담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해 이윤제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 권숙권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박지웅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가 토론에 나선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불법의 계엄이 발생한지 열흘이 지났고, 국무총리와 여당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제2의 쿠데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란의 주범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최고 권력, 군 통수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혼란을 종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핵이다. 직위정지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외교안보의 안정적 수습도 필요하고, 예기치 않은 안보적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당위성을 확인하고 아울러 쿠데타에 가담한 동조자의 형사적 책임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에 더해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역사적으로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고 헌정체제를 파괴하려는 범죄

로, 그 심각성에 비춰 가장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어 왔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단호해야 하는지 되새겨야 한다” 며 “국회 역시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은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내란중범들에 대한 대응과 이들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해 긴급하게 토론회를 기획했다” 며 “아직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를 통해 내란범의 즉각 탄핵 필요성에 법적,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고 오늘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 토론회의 진행은 아래의 표와 같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 관한 법리적 쟁점 토론회 차례

	시간	
개회식	14:00~14:10	개회사 :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1부	14:10~15:20	<p>[윤석열 내란 사건에 관한 헌법적 쟁점]</p> <p>좌장 :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발제 :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내란범에 대한 대응 : 반드시 탄핵해야 되는가?”</p> <p>토론 :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이현환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이황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허창환 변호사</p>
	15:20~15:30	Coffee Break
패널 2	15:30~16:40	<p>[윤석열 내란 사건에 관한 형법적 쟁점]</p> <p>발제 : 정한중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p> <p>“내란 가담자의 형사책임”</p> <p>토론 : 이윤제 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p> <p>권숙권 변호사(법무법인 시민)</p> <p>박지웅 변호사(전 청와대 행정관)</p>